

광주시, 공공기관 8곳 통합·3곳 기능 강화

시장-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경영효율성 제고 및 시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방점
 공공기관 24개서 20개로 감축...고용승계 철저 보장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통합돼 '광주관광공사'로 거듭난다. 또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광주테크노파크'로 통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경영 효율성 제고와 시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유사·중복 기능 조정 및 민간 경합사업 정비 ▲기능중심 조직 통합 및 기능 강화 ▲통합에 따른 고용보장 등 3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됐다.

구조혁신 원칙에 따라 8개 공공기관이 4개 기관으로 통합되고, 3개 기관은 기능이 확대된다. 이로써 광주시 공공기관은 기존 24개에서 20개로 감축된다.

※ 광주시 공공기관 추이: 민선 4기 14개→5기 18개→6기 21개→7기 24개

통합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센터)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

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

광주관광공사는 광주 관광전략과 관광산업에 대한 기획력을 강화하고, 마이스산업 전·후방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광재단과 김대중센터를 통합해 탄생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과학기술과 산업 플랫폼을 일원화해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진흥까지 전주기 과학기술·산업융합 체계를 조성하고자 과학기술진흥원과 통합한다.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은 복지 조사·연구가 복지서비스로 제공되고, 다시 환류돼 광주복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연구(복지연구원)와 집행기관(사회서비스원)이 합쳐진다.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은 광주형 일자리 성과가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인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과 고용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을 통합한다.

기능이 강화된 공공기관도 있다. ▲광주교통공사(도시철도공사)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국제기후환

경센터)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진흥원)이다.

광주교통공사는 철도 중심에서 대중교통 전반을 아우르는 광주교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기후위기, 에너지, 자원순환, 환경교육, 녹색건축 등 5대 분야를 집적화한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시민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교육, 맞춤형 인재교육 등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갖는다.

강기정 시장은 "조직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높이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경쟁력이 높은 사무는 과감히 민간이양 또는 위탁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민선 8기 핵심 현안에 대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공공기관의 기능을 강화한다.

강 시장은 특히 "통합되더라도 소속 직원의 고용은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출직인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통합돼 '광주관광공사'로 거듭난다. 또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광주테크노파크'로 통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다. /광주시 제공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 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새로운 지자체장이 선출될 때마다 불거지는 비효율 요인을 제거하고,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해, 시장과 기관장이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정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연간 예산이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시의회와 협의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인사청문 대상은 8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 인사청문회 추가 4개 기관: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그린카진흥원

인사, 회계·계약 등 공통운영에 대한 표준지침을 제정하고, 징계규정을 상향 조정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인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①기관통합→②기능조정(4월말)→③기관별 경영혁신안 발표(6~7월)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을 위한 기관의 제반 절차가 마무리되면 통합기관별 경영혁신안을 차례로 발

표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공기관의 존립이유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과 시민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며 "시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공공기관은 조직논리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공공기관 혁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비효율,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으로 광주발전의 시계를 늦출 수 없다"며 "효율성과 자율·책임·역량이 강화된 광주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윤규진 기자

전남, 지능형 스마트공장 구축 80% 지원

전남도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제조 현장 혁신 선도를 위한 '2023년 전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지능형 스마트공장(고도화 단계) 구축 지원사업을 필요로 하는 전남지역 중소중견 제조

기업이다. 휴·폐업 중이거나 현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별 정부지원금은 사업비의 50%인 최대 2억 원이고, 도는 기업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추가로 30%(최대 1억 2천만 원)를 더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3월 16일까지 서류를 갖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재)전남테크노파크(061-729-2581~3)에 문의하면 된다.

스마트공장은 공장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을 정보통신(IT) 기술로 통합,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생산품 향상, 품질 향상, 원가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30% 지방비 매칭 비율

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52개 사에 머물렀던 참가 기업이 2019년 이후 4년간 661개 사로 늘어나는 등 매년 모집 경쟁률 평균 3대 1을 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을 분석한 결과, 고용 증가 2명, 매출증대 17.9%, 생산성 향상

29.4%, 품질 향상 52.3%, 원가 절감 29.0%, 납기 준수를 24.4% 향상 등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호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고도화된 지능형 공장 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